

# “교육과정 5·18 삭제는 민주화 역사 부정” 들끓는 광주

### 5월단체·지역정치권·교육계에 청년단체까지 “교육 개악” 규탄 “민주주의 발전 역행 안될 말... 교육과정에 다시 명시하라” 촉구

정부가 지난해 12월 22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전면 삭제(광주일보 1월 4일자 6면)한 것과 관련해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4일 5·18단체를 비롯해 광주지역 정치권, 교육계, 청년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5·18민주화운동을 개정 교육과정에 다시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이 빠진 이번 교육과정은 “민주화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며, 정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된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철회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복원하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5월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5·18민주화운동 2022 개정 교육과정 삭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는데 이번 교육과정 어디에도 5·18민주화운동은 담기지 않았다”면서 “교육부의 개정발표는 민주주의 역사를 삭제하는 것이며,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이를 방관한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지역 청년들도 규탄 목소리를 냈다. 5·18 청춘서포터즈 ‘오월이다’ 등 청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교과서를 통해 5·18을 접하고 오월 서포터즈까지 맡게 된 청년들이 많은데, 현 정부는 미래 세대와 5·18을 연결하는 길마저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80개 교육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개정 교육과정은 정의로운 역사 의식을 봉쇄하고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마비시키는 반교육적, 반역사적 폭격”이라며 “오월을 역사에서 도려내려는 윤석열 정권의 교육 개악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에서 민주화운동 교육 약화를 초래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전으로 제출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5·18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그 숭고한 정신은 계승 발전돼야 한다”며 “미래를 짚어줄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에 5·18민주화운동이 자리하고 있다”며 “그런 5·18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역사를 지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5·18을 삭제하도록 한 책임자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관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4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항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5·18의 숭고한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2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5·18에 대한 현 정부 태도는 외면과 멸하, 왜곡으로 가득하다”며 “5·18과 광주시민, 국민을 모욕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광주·전남 의원 일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 오월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과 전남도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교과서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한다는 것은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지우려는 ‘파렴치한 일본정치인 따라하기’와 다를 바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전남도의회도 “저항적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5·18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 비하를 넘어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심히 금감할 뿐이다”면서 개정 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에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당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을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지역사회 뚝뚝 뭉쳐 항의·서명운동... 한달 만에 시안 포함

2011년 집필기준에서 삭제됐던 5·18 어떻게 바로잡았나

### 200여 기관·단체 연석회의 만들어 청와대에 항의 서한 등 한마음 대응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과 관련, 지난 2011년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5·18이 삭제됐던 것을 바로잡았던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5·18을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을 지역사회가 뚝뚝 뭉쳐 한달 여만에 집필기준 시안(草案)에 다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 8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도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5·18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됐다.

기준 집필기준에 민주화와 관련해 두 차례나 거론됐던 5·18을 아예 없애 버린 것이다. 이 장관은

당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강화의 원칙을 적용해 압축적으로 기술하다보니 5·18 서술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이번 교과과정에서 5·18을 삭제한 것과 같은 이유를 들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5·18 관련 단체와 기념재단은 물론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5·18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5·18 관련 단체, 시민단체 대표 80여 명이 ‘새 역사교과서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위한 광주지역 유관기관·법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연석회의는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 이주호 과학기술부 장관을 포함 민주당 순환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 측을 압박할 수 있도록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전면 바꾸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에까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연석회의의 요구사항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즉각 폐기 ▲5·18 민주항쟁의 역사와 의미 ▲5·18 기록물 유엔·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실 수록 등이었다.

광주시가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폐기와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를 위해 ‘온라인 국민서명운동 사이트’를 개설해 하루만에 서명자가 4000명에 달하는 등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연일 각 단체에서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새 집필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연석회의 참가 단체도 200여 곳이 넘었다.

결국 1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 진압과 청산 노력 등 관련 내용은 집필기준에 모두 명시했다”고 발표했다.

5·18민주화운동과 역사 정체성 확립을 요구하는 지역여론이 반영돼 5·18민주화운동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포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경찰, 인터넷방송 플랫폼 도박공간 악용 BJ 송치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BJ가 방송을 도박 공간으로 악용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는 BJ A(28)씨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개인방송에서 ‘자동 룰렛’ 게임을 진행하며, 시청자에게 일정 금액의 별풍선(1개당 100원 상당)을 받고 일부 당첨된 시청자들에게 골드바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해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9000명 가량의 구독자를 가진 A씨는 시청자로부터 받은 금액중 일부를 상품으로 제공하면서 사행심을 자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동룰렛 방식의 승률을 조작해 대부분의 금액을 본인인 가로채고 미끼 상품을 제공하면서 시청자 수를 꾸준히 늘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은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운영자(BJ)가 채널의 시청자 숫자 및 조회 횟수에 따라 후원금 또는 광고 수익을 받고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택시기사 운전 중 심정지 사망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이던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광주광역시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산유원지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갓길의 연석을 2·3차례 연달아 충돌했다.

A씨는 행태를 몸이 기면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 B(여·28)씨는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평소 당뇨 등을 앓고 있어 과거에도 쓰러진 전력이 있다”는 유족들의 진술과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부터 몸을 앞으로 숙였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운전 도중 의식을 잃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

### 전원주택 (1채) → 7,000만

(토지 분양 중) 장성담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

- ① 세컨하우스
- ② 소형 주택
-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 ④ 주말 하우스 최고
-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

010-6670-9800

### 상가매매(상무지구)

(매매, 임대) 권리금 없음

▶ 중심 상업지구 (유흥 적합)  
(6층, 7층) = 140평  
시세 → 10억

▶ 급매 7억  
보3천 월 380만 ( 용 4억5천 )

###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 기초부터 실전 )
- 2) 중급반 (실전부터 ~ )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

010-2614-9801